

## 大學의 改革과 文化創造

崔 淙 旭

(國民大 教養學部)

### 1. 問題의 提起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자는 ‘大學이 무엇인가?’, ‘文化創造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서부터 出發하지 않고 구체적인 우리 大學의 現實에서부터 出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논의의 초점이 한국 사회의 變化와 더불어 현 단계 大學의 位相을 검토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大學이 급속하게 變化하는 한국 社會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재검토하고 批判함으로써 大學의 새로운 位相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의 大學이 급변하는 현대 社會에 조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大學이 社會 變化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우리 大學의 現實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의 大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진정한 文化創造者로서 大學의 位相을 점검하려고 한다. 동시에 이러한 시도가 하나의 시론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둔다.

現代社會는 급격한 變化의 와중에 있다. 소련을 위시한 東歐圈의 改革은 2차 世界大戰 이후 世界를 支配하여 온 冷戰體制를 붕괴시켰다. 소

련에서는 私的 所有와 임노동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고 급진적 經濟改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폴란드에서는 ‘연대 노조’가 주도하는 최초의 비공산권 정부가 등장하였고, 헝가리 사회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포기함으로써 社會民主主義를 모델로 하는 政治·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東歐圈에서 가장 모범 국가로 지칭되던 東獨이 西獨에 흡수·통합됨으로써 페레스트로이카가 물고 온 충격은 그 극에 달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社會主義의 改革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南·北韓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東·西 冷戰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미국과 소련은 페르시아만 사태에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의 世界秩序에 많은 變化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世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理念보다는 自國의 이해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普遍的 價値의 우위라는 구호 아래 진행되고 있다.

東歐뿐만 아니라 西歐 資本主義 國家들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變化의 추동력은 科學技術 革命이다. '70년대 중반 세계 공황 이후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새로운 科學技術이 西歐의 社會構造와 階級關係를 급변시키고, 소련과

東歐의 體制改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東아시아 資本主義 國家들에게도 많은 變化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극소 전자 기술 혁명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과 변화는 새로운 社會構造의 變化를 야기하는 動力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력의 변화는 脫產業的 經濟構造의 變化와 그것에 相應하는 階級的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科學技術 革命은 지식인 계급의 역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社會變化的 와중에서 우리의 大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大學은 우리 社會가 직면해 있는 構造의 變化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社會構造의 變化가 물고<sup>3</sup>온 文化的 危機現象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의 大學은 우리 時代와 社會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미래<sup>4</sup>社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大學은 大學人의 특유한 創造的이고 批判的인 知性を 바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共同體的인 성격의 文化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社會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社會와 時代的 狀況과 무관하게 自己中心的이며 폐쇄적인 채로 단순히 社會와 政治의 下位體系로서의 道具的 역할로 自足하고 있는가? 大學은 冷戰體制의 副產物인 黑·白의 단순 논리로부터 自由로운가? 冷戰 이데올로기로부터 自由로운가?

## 2. 文化創造와 大學의 理念

大學은 批判的인 知성과 野性的인 感性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文化를 창조하는 곳이다. 물론 大學만이 文化를 生産하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大學이 왜곡된 향락 문화와 소비 문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文化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大衆文化를 생산하는 대중 매체와는 구별된다. 그렇다고 해서 文化의 왜곡 현상과 文化的 植民主義 現象이 大學에 있어서도 常存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否定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이 政治·經濟的인 構造와 맞물려서 우리 社會의 矛盾의 악순환 과정을 반복

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오도된 文化의 표절이나, 西歐의인 것이 가장 文化的인 것으로 치부되는 우리의 現實이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왜곡된 文化現實에 대한 批判的인 觀點에서 문제를 提起하려고 한다.

大學이 文化創造의 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大學 自體가 創造의 精神의 産室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大學이 未來社會의 進路에 대한 理念의 創出地라는 점에서, 그리고 아직 定立되지 못하고 있는 바람직한 主導文化를 形成할 主體라는 점에서 創造的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大學이 西歐의 學問이나 藝術을 受動的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단순히 복사하거나 모방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大學은 自由로운 知性들이 모여서 함께 對話하고 討論하며 研究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大學은 무엇보다 創造的인 思惟가 숨쉬고 活動할 수 있는 自由로운 空間이어야 한다. 무비판적 思考나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支配的인 場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文化創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大學은 政治圈으로부터 自律性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思想과 表現의 自由를 토대로 하는 學問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한다.

文化創造의 主體로서 大學은 또한 生産的이고 批判的이어야 한다. 大學은 우리 社會에 支配的인 소모적이고 향락적인 대중 문화에 대해 批判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중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現實에의 매물이 아닌 現實에 대한 정확한 認識을 계몽한다는 점에서 生産的이어야 한다. 大學은 人間을 소외시키고 文化的 欲求 自體를 商品化하고 왜곡시키는 大衆文化를 批判하고 있는 批判을 통해서 소외된 文化를 해체시킴으로써 건강한 文化를 形成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大學이 창조하는 새로운 文化는 批判的 機能과 계몽적 기능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이러한 대체 문화의 産室로서 大學은 언제나 批判的인 知성의 場이어야 한다. 批判이 없고 비생산적인 불모지로서의 大學은 存在할 價值조차 없다. 大學은 새로운 文化創造를 目標로 기존 社會의 왜곡된 文化를 批判할 수 있는 生産的인 장소이어야 한다.

大學은 開放的이어야 한다. 文化創造는 自己

中心的이고 폐쇄적인 곳에서는 불가능하다.開放的이어야 한다는 것은 空間的인 意味에서뿐만 아니라 構成員들의 자세에 關係해서도 그러하다.大學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理想的인 言語狀況 (ideale sprachsituation)'으로서 개방적이어야 한다. 또 大學이 創造的이고 生産的인 文化를 創出하기 위해서는 大學의 構成員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열린 마음이 없이는 진솔한 學問的 對話나 討論이 불가능하며 풍부한 藝術活動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學問과 藝術에 있어서 獨創性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그러한 學問과 藝術에 있어서 獨創性이란 것도 언제나 진솔한 對話와 討論을 밑거름으로 해서만 가능하며 自己中心的인 폐쇄성이 아닌 開放性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文化創造의 主體로서 大學은 共同體 指向的이어야 한다. 文化는 個人的인 향유물이 아니라 그 社會 구성원 모두를 위해 存在하며 그 社會 共同體를 위해 存在한다. 따라서 大學은 民族文化의 定立이라는 曠중한 과제를 주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大學은 文化創造의 機能을 통하여 民族 構成員 상호간에 신뢰와 相互確認을 다지고 하나됨을 느끼며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共同的인 責任感을 가질 수 있도록 共同體 指向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共同體 指向的인 文化創造者로서의 大學은 外國 文化의 단순한 受容地나 消費地가 아니라 批判的인 過程을 통하여 외래 文化를 수용함으로써 民族文化를 더욱 發展的이고도 풍부하게 하는 主體的인 場이어야 한다.

### 3. 文化創造를 위한 前提

大學이 文化創造라는 生産的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첫번째 條件은 自律性의 確保에 있다. 12세기 北이탈리아 볼로냐大學의 설립 이래 西洋에서 大學은 政治權力이나 敎會權力으로부터 大學의 自律性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研究의 自由, 敎授의 自由, 思想의 自由, 表現의 自由를 그 주된 內容으로 하는 學問의 自由는 政治權力과 敎權과의 투쟁 과정 속에서 쟁취한 大

學의 빛나는 전리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大學의 自律性은 權力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大學人들의 오랜 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왜 大學은 自律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피나는 투쟁을 하여 왔는가? 그 이유는 大學의 生命인 眞理探究와 건강하고 批判的인 文化의 創造는 오직 學問의 自由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現代의 大學은 거대한 國家權力의 統制 하에서 점차 批判的인 機能을 喪失하고 實用的인 機能 集團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西歐의 大學은 學問의 自由를 향유하면서 비교적 높은 自律性을 確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우리의 大學은 國家權力과 外勢와 밀착하여 기존의 保守的·非民主的인 秩序를 유지하면서 성장하여 왔다. 이러한 現象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近代的인 大學制度가 도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리고 8·15 이후 미 군정으로 이어지는 分斷의 歷史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지도 모른다. 하지만 大學은 現狀維持의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批判的인 代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民族의 未來를 지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大學은 마땅히 反省하고 自我批判하여야 한다.

한국에서의 近代的인 大學敎育制度의 도입은 3·1 獨立運動 이후 강압적인 무단 정치에서 기만적인 文化政治로 政策을 바꾼 日本 植民地 勢力에 의한 것이었다. 경성제대의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植民時代의 大學은 根本的으로 日本 植民地 統治에 필요한 知識人을 배출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敎育을 통하여 조국의 獨立을 위해 노력한 人材들도 배출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副産物에 불과하였고, 主流는 역시 총독부 식민지 통치의 선봉대로서 관료 및 친일적인 文人과 언론인 그리고 學者를 위한 敎育이었다. 이러한 植民地 狀況에서 大學이 政治權力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오히려 政治權力의 충실한 下手人이 되어 植民地 現實을 수용하고 肯定하도록 하는 데 大學의 存在理由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8·15 이후 美軍政 하에서의 敎育政策도 自主的인 民族·民主國家의 建設에 필요한 內容과는 거리가 멀었다. 戰後 世界的인 次元에서 시작된

冷戰體制는 親日·反民族 勢力의 淸산이라는 歷史的 과제를 無산시켰다. 동시에 米軍정의 敎育 政策은 친미·보수 세력이 外勢를 배경으로 敎育의 特點을 통하여 계속적인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分斷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米國식 敎育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국대안’ 파동은 그러한 과정 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국대안’ 파동은 이후 敎育의 중앙 집권화와 정부에 의한 獨점화를 가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敎育의 內容과 敎授充員에 있어서도 米國적인 것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大學의 自律性和 民族性이 후퇴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게다가 ’50년대 이후 大學 人들의 米國 유학 붐은 日帝 하의 日本 유학 붐과도 흡사한 성격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켰다. 米國 유학파들은 米國 社會를 모델로 한 이론들을 배워 와 大學의 主流的 學風으로 정착시켰으며 大學 내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하였다. 이처럼 米國식으로 개편된 大學은 이제 米國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대개자로서가 아니라 그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1950년대 敎育의 米國화 경향은 文化的 從屬의 한 部分이었다. 敎育 원조로 실시된 敎育 사 절단의 과정, 國內 敎育학자의 米國 과정, 교환 敎수제 등은 米國 文化의 流入과 함께 米國 勢力의 強化를 초래하였다. 西歐 學問은 곧 米國식 學問을 意味했고, 米國식 경험주의·실증주의와 機能主義가 大學의 主流理論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극단적인 冷戰 이데올로기가 意識적으로 强要된 條件 속에서 西歐 學問의 受容은 保守的·機能主義的 米國식 學問의 流入으로 知的·學問的 종속화를 심화시켰다. 물론 당시 學者들의 知的 水準으로 보아 批判的 受容이 아닌 一次的 인 理解가 더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知的·學問的 종속화는 학문 宗主國의 변화에 따른 ‘學問市場(academic market)’의 變화와 學問 研究者의 充員構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植民母國이었던 日本의 敗戰과 米國의 등장은 學問市場이 日本에서 米國

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제 韓國이 日本의 ‘學問的 消費市場’이 아니라 米國의 ‘學問的 消費市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變化가 냉전적·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민족주의적 경향의 상설로 귀결되었다는 데 있다. 물론 學問의 普遍性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學問이 普遍性뿐만 아니라 特殊性을 내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동시에 學者가 民族主義的 立場을 방기하는 것이 곧 學問의 普遍性을 담보하는 것이 아님도 사실이다. 오히려 文化的 植民地化 現象은 ‘意識의 植民地化(Kolonisierung des Bewußtseins)’를 초래하여 自己의 問題를 자기 方式대로 認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植民中心部의 觀點과 立場에서 認識하게 한다는 問題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現象을 全免國 敎수는 ‘外的 植民化’로 규정한다. 더 나아가서 全 敎수는 米國 大學과 우리나라 大學 간의 植民化와 유사한 現象이 서울 소재의 몇몇 명문 大學과 地方大學 간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內的 植民化’라고 批判한다.

文化創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大學은 이러한 植民地化 現象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學問의 風土 속에서 어떻게 批判的이고 民族共同體 지향의 文化가 창출될 수 있겠는가? 大學의 自律性은 ‘外的 植民化’에 따른 학문의 종속을 극복하고 自主性을 確保하는 것과 無關한 것이 아니다. 米國에 대한 批判이 反國家的인 것으로 또는 좌경·용공으로 매도되는 왜곡된 學問의 분위기는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植民地化된 意識狀態에서 創造적이고 批判적인 文化創造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米國식 西歐 學問의 無批判的·流行的 受容이 아니라 철저한 學問의 치열성을 가진 批判과 檢證의 過程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大學의 自律性은 또한 政權과 財團으로부터 學問의 自由를 확고히 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政府에 의한 大學의 統制는 우리에게 是 공공연한 現實이다. 계속되는 권위주의적 獨재 政권은 여러 가지 制度的 裝置를 통하여 大學을 관리하여 왔다. ‘敎수 책임용제’는 그 대표적 예이다. 文敎部는 政府批判적인 敎授들을 大學

에서 추방하는 데 이 '교수 책임용제'를 惡用하여 왔다. 이 제도의 本來的인 目的과는 달리 大學의 自律性을 억압하는 데 교수 임용제가 이용된 것이다. 財團은 재단대로 '교수 책임용제'를 통하여 財團에 批判的이거나 非協助的인 教授를 學원에서 追放하고 있다. 이번 國會에서 改惡된 새로운 '私立學校法'은 財團에 의한 進擧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敎權 確立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學問의 自由에 직접적인 걸림돌이다. 1988년의 徐寬模 教授 사건은 思想과 表現의 自由를 기반으로 하는 學問研究가 國家의 公權力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받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지금도 保安法은 學問 탄압의 빌미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冷戰의 產物은 脫이데올로기화되어 가고 있는 國際的 추세 속에서 더 이상 存在할 價値를 喪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낡은 法은 빨리 개·폐되어야 한다. 學問의 發展을 저해하는 장치들이 하루 빨리 정비되고 大學은 學問探究의 殿堂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할 때이다. 中世의 宗教裁判과 같은 思想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學問의 自由가 保障될 때, 비로소 大學은 文化創造의 機能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이 創造的이고 生産的인 文化를 產出하는 場이 되기 위해서는 大學이 民主的이고 開放的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大學과 大學人은 어떠한가? 大學社會는 民主的이고 自由롭고 理性的인 社會인가? 大學人은 정말 진정한 意味에서의 自由人인가?

大學이 民主的이기 위해서는 對話와 討論 文化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대화와 토론은 教授 상호간 그리고 教授와 學生 간에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大學의 實狀은 이러한 對話와 討論 文化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 거리감을 조장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權威主義이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조장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家父長의 태도이다.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는 大學 내의 人間關係를 上·下의 수직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문제는 선·후배 간의, 사제 간의 관계가 불평등한 종속 관계로 변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關

係에서는 對話나 討論이 아니라 일방적인 지시와 복종이 主流를 이루게 된다. 대등한 人格的인 關係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학교와 지역의 선·후배의 關係에 따라 一方的인 關係가 形成되고 이러한 관계가 大學의 支配的인 關係가 된다. 이러한 非民主的인 狀況에서 건전한 文化와 學問의 發展이 가능하겠는가?

권위주의는 教授와 學生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教授는 敎權이라는 방패막이를 빌미로 大學의 民主化를 주장하는 學生들의 合理的인 主張조차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學生들의 主張 가운데에는 教授들이 受容하기 어려운 要求事項들도 있다. 그러나 教授들이 충분히 受容할 수 있는 合理的인 제안들조차 묵살당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커리큘럼의 개정이나 새로운 교수 및 강사의 초빙에 대한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學生들이 듣고 싶은 科目이 開設되어야 하고 그 분야를 담당할 교수나 강사 초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教授들의 이해 관계나 권위주의적 태도에 의하여 묵살 당한다. 이 경우 教授들은 學生들을 정당한 對話나 討論의 파트너로서 認定하지 않는다. 그들의 主張을 견지하는 것은 教授의 권위에 도전하는 不敬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그들은 敎育의 主體로서의 자격을 認定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不平等한 關係는 수업 시간에도 연장된다. 고압적인 자세로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리 대답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질문 자체를 봉쇄하고, 討論 自體를 기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狀況에서 건전한 學問의 發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권위주의의 하나는 '강요된 권위'에서 발생한다. 학문의 영역에서 권위란 그 學問分野에서 學問的 業績과 實力을 높이 認定받고 評價받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분야에 정통할 때 비로소 권위를 認定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大學에서 문제되는 권위는 것처럼 他人에 의해 認定받는 권위가 아니라 自己의 권위를 他人에게 強要하는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교수들 가운데 자기만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大家(?)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자기 分野에서 자기 學問

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學者로서의 긍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學者의 빛나는 훈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긍지는 마땅히 그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 근거란 學問의 깊이와 誠實性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러한 것과는 달리 自己中心의이고 獨斷的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강요된 권위’는 심각한 권위주의적 병폐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위주의는 자기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정당하게 評價하지 않거나와 다른 사람들의 主張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활발한 비판적 討論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討論이 없이는 學問의 發達을 期待할 수 없다. 獨善的이고 獨斷的인 이러한 態度가 自由로운 학문적 분위기를 해치고 生産的인 學問 風土를 파괴시키게 된다.

우리의 大學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問題는 理念의 장벽과 경직된 思考方式이다. 급격히 變化하고 있는 世界의 變化에 韓國의 大學과 大學人들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소련과 東歐에서는 脫이데올로기로 지향하는 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이러한 페레스트로이카가 오히려 冷戰 이데올로기와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페레스트로이카는 社會主義의 완전한 몰락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맑스 理論 自體의 파산을 意味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제 맑스의 理論에 關心을 갖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왜곡된 思考와 극도로 單純化된 論理가 韓國의 大學人과 知識人들에게 彌滿하여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思考를 가지고 있는 教授들 가운데 대부분이 맑스의 理論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理解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大學에서 맑스 理論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한국의 大學이 부딪친 問題는 그것을 가르칠 教授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년 사이에 맑스 理論에 정통한 學者들의 수가 갑자기 증가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에서 맑스 理論의 완전 파산을 외치고 자신있게 선포하는 사람들의 수가 갑

자기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철저한 學問의 研究와 批判을 통하여 도달한 結論이 아니라 社會主義 改革 自體가 그들로 하여금 맑스주의의 완전한 失敗를 確信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의 逆說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러한 確信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冷戰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것이다. 黑·白 論理가 바로 그러한 確信을 가능하게 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흑·백 논리가 냉철한 學問的 分析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자신의 믿음 자체에 대해 자그마한 의심조차 허용하지 않는 맹목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學問의 出發은 바로 이러한 檢證되지 않은 確信의 파괴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베이컨의 ‘우상의 파괴’나 데카르트의 ‘회의’는 언제나 모범적인 철학적 행위이다. 그러나 냉전 이데올로기와 흑·백 논리는 이러한 철학적 행위를 無化시킴으로써 學問 自體를 불구로 만든다.

우리의 大學은 이제 이러한 경직된 思考와 왜곡된 理念의 쇠사슬에서 한시 바빠 解放되지 않으면 안 된다. 學問·藝術의 발달과 創造는 경직된 이데올로기나 思考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설사 社會主義의 改革 自體가 現存 社會主義를 資本主義로 變化시키는 것으로 귀결될지라도 그것이 古典理論家로서 맑스나 기타 맑스주의자들에 대한 연구를 불필요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痛苦를 읽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 社會主義 改革 自體가 資本主義의 無矛盾性을 담보하여 주는 것도 결코 아니다. 大學은 극단적인 黑·白 論理가 支配하는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學問的 檢證도 없이 단순한 確信이 자의적으로 통용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

大學이 學問과 藝術 발달의 전당이 되기 위해서는 ‘思想의 多元主義’와 ‘實驗精神’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多元主義는 民主主義의 전제이며 人間의 認識論的·存在論的 限界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眞理를 독점할 수는 없다. 따라서 眞理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對話와 討論이다. 그러나 한국 大學의 現實은 어떠한가? 多元主義를 주장하는 소위 自由主義者들은 많다. 自由主義者를 자처하는 사람도 大學에는 많다. 그들은 多元主義를 역설하고 강조한

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自由主義者도 多元主義者도 아니라는 데 우리 大學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大學과 學界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미국 편향적인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大學에서는 소위 제도권의 主流學問을 批判하거나 기존 學界를 批判하는 勞力이 철저하게 이단시되고 소외된다. 만약 우리의 大學이 진정한 意味에서 自由主義者들과 多元論者들이 모여 함께 研究하고 活動하는 場所라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경직된 思考와 규격화된 지배적 '담론(Diskurs)'이 批判的 思惟와 다양한 담론을 질식시키는 것이 오늘날 한국 大學의 實狀이다. 進歩的인 學者들이 설 자리조차 없고 이단시 되는 풍토에서 어떻게 學問的 討論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진보적이거나 批判的인 사람은 처음부터 教授充員의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곳에서 어찌 多元主義와 自由主義가 논의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自由로운 實驗精神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언제나 實驗精神에 충만한 곳이 바로 大學이어야 하지 않는가? 實驗精神이 없는 곳에서 어찌 創造的인 文化가 가능하겠는가? 사상의 이단성이 불온시 되고 자유로운 實驗精神 자체가 위협시 되는 반면 규격화된 스테레오 타입만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또 정상적인 것으로 강요되는 곳에서 獨創的이고 건강한 學問的 發展과 文化創造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한국의 大學이 안고 있는 또다른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는 학연·지연 등으로 형성된 非合理的인 慣行과 派閥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행과 파벌이 大學의 民主化를 방해하고 건전한 學問的 發達과 건강한 文化의 發展을 저해한다. 大學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學緣을 중심으로 한 비합리적인 관행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행이 신입 교수 채용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신입 교수의 채용이 매우 非合理的인 方式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신규 교수 채용이 학과 내의 해계 모니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느 특정 大學 出身이 아니면 大學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않다. 중요한 것은 實力이

나 學者로서의 誠實性과는 무관하게 기존 교수들의 기득권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나 學問的으로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아닌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사람들이 쉽게 채용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 교수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 사람들이 선호된다. 實力은 차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大學은 어떻게 될까? 교수의 임용이 학벌과 개인적인 親疎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大學에서 學問的 發達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非合理的인 관행 속에서 금권이 개입되고 지연·혈연과 학연에 의한 파벌이 조성되어 파벌 간에 심각한 해계모니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大學은 교수들이 정치 훈련을 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장소도 아니다. 大學은 研究하고 教育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부한 常識조차 희망 사항에 불과한 곳이 우리 大學의 현실이 아닌가?! 바로 여기에 한국 大學의 모순과 비극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성된 파벌이 大學의 民主化를 그 근저에서 위협하고 있다. 大學 總·學長 直選制가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대개가 파벌 때문이다.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끼리 견원지간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大學教授 社會에서 非民主的인 관행과 獨斷이 횡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이러한 狀況에서 어찌 共同體 지향적이고 건강한 文化創造가 가능하며 學問的 發達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4. 大學의 危機와 改革의 必要性

오늘의 한국 대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世宗大 사태는 그러한 위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예 지나지 않는다. 계속되는 學內紛糾, 데모, 教授와 學生 간의 높고 깊은 不信의 壁, 學內的 非民主的 制度和 관행은 가장 理性的이고 合理的의이며 民主的이어야 할 大學의 理想과는 거리가 멀다. 大學 내에서 民主化와 自主化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大學들이 처해 있는 矛盾的인 狀況을 反映하고 있다.

大學이 진정한 意味에서의 人格과 學問을 도야하고 研究하는 場이요, 가장 主體的이고 創造的

인 文化創造의 場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大學의 改革이 필요하다. 그러나 大學의 改革은 非合理的인 制度와 관행의 改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大學人들의 자세와 意識의 改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制度的 改革과 個人的 次元에서 자세와 意識의 改革은 서로 배타적이고 分離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이고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 制度的 改革이 없이는 意識의 變化를 가져오기 힘들고, 意識의 改革 없는 制度的 改革은 無意味하고 空虛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改革은 大學人들 사이의 광범위한 對話와 討論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大學이 改革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社會가 改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政治의 改革과 民主化가 先行되어야 한다. 물론 政治와 經濟가 分離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政治의 民主化와 改革이 없이는 社會改革과 民主化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政治의 自由가 없는 곳에서 진정한 意味의 學問의 自由가 있을 수 없고 創造의이고 主體的인 文化의 건설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政治의 民主化를 포함하는 우리 社會의 民主化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分斷 이후의 歷史의 現實들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정치권은 계속되는 독재 권력을 통해서 보여 주듯이 가장 비민주적인 관행이 日常化되어 있는 곳이다. 따라서 政治人에 대한 극도의 不信이 모든 국민들에게 팽배하여 있다. 여·야를 포함한 기존의 政治人들에게 改革을 期待하기란 힘들다. 그들의 경직된 思考方式과 非民主的 發想으로는 급변하는 國際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政治人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政治觀과 政治意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를 가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政治人들에게서 政治改革과 民主化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思考의 요청은 정작 소련과 동구권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낡아빠진 冷戰의 思考方式에 물들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한국의 政治人들에게 필요하다. 政治改革을 포함한 社會改革은 소련과 東歐圈에만 필요한 것

이 아니라 바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이다. 총체적 난국이니 위기니 하면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社會改革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政治現實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危機的 狀況을 의면하고 東歐圈의 改革과 혼란을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즐기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無能과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진정한 民主化와 改革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政治人들에 의한 社會의 改革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의 유일한 代案은 市民들에 의한 改革運動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에서는 市民主導의 改革運動조차도 힘들다. 정권에 의한 물리적 탄압과 억압이 자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東歐圈에서 보았듯이 市民運動이 社會改革의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大學의 改革도 바로 이러한 次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大學人들이 우리 사회에 모범적으로 改革의 意志를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大學은 어떠한 곳보다도 民主的이고 批判的이며 主體的인 共同體이어야 한다. 大學이 社會改革의 主役이 되기 위해서 現在의 非民主的이고 保守的인 분위기를 쇠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大學 自體가 시급히 改革이 필요하다는 점에 바로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政治와 社會 改革이 어려운 現實에서 大學이 改革되어 民主的이고 主體的인 상아탑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현실성에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大學人 스스로도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만큼 大學의 改革이 至難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大學의 改革조차 어렵다면 과연 社會改革과 政治改革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大學의 改革이 그래도 쉬울 것이다.

문제는 大學人 스스로가 그러한 改革의 意志를 철저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大學人이 새로운 각오로 自己中心的이고 패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態度를 과감하게 포기한다면 大學의 改革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최고의 知性人이 모인 大學에서 民主的이고 主體的인 共同體와 批判的이고 創造的인 文化創造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사회 어디에서 民主化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大學에서의 非民主的인 制度와 관행은 大學人의 改革意志 여하에 따라 비교적 어렵지 않게 改善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大學人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있다. 大學을 改革하는 주체는 역시 大學人 스스로이기 때문이다. 大學人이 大學의 改革에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大學人이 다른 집단이나 정치인들보다 大學 내에서의 이해 관계에 비교적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大學 내에서도 學科 利己主義, 각 大學別 이해 관계

와 파벌 등 大學人 사이의 복잡한 關係들이 存在하기 때문에 大學人이 모든 이해 관계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利害關係란 理性的·合理的으로 克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관건은 大學人 스스로의 民主化에 대한 意志에 달려 있다. 大學人이 現狀維持에 만족하고 現實에 안주하는 한 大學의 改革은 말할 것도 없고 政治圈을 비롯한 우리 社會의 改革은 기대하기조차 어렵다. \*